

韓·印, 거물급 기업인 33명 참석... 경제협력 물꼬 터졌다

(한국 16명·인도 17명)

CEO 라운드테이블 개최

자동차·인프라 등 5개분야 협력
AI·IoT 등 신기술분야 공동추진

한국과 인도의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동차, 인프라, 전자&IT, 창업, 혁신생태계 등 5개 분야에서 워킹 그룹, 즉 실무단을 구성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관련 산업분야 공조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내용은 두 나라 당국자들에게 적극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미래제조기술, 로봇, 녹색기술 등 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신기술분야에서 공동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기로 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인도 총리실 영빈관에서 '한·인도 CE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양국 정부·기업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인도 국가 원수인 나트 코빈드 대통령 부부,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성명에는 ▲5개 협력분야 실무단 구성 ▲신규기술 공동프로젝트 추진 ▲경제인 행사 정례화 등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상의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자리에는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함께 참석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항상 귀를 열고,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CEO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측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

장, 안승권 LG전자 사장, 손경식 한국경제영자총협회장 등 16명이, 인도 측은 인도상의연합회 라 세쉬사 회장,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마힌드라&마힌드라 고엔카 파한 사장, 엑스프로 시드하스 베라 회장 등 17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양국에서 각각 3개 기업이 사업계획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도가 전자제품의 세계적 생산거점과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수출에 대한 세제지원과 무역인프라 개선을 건의했다.

1996년 첸나이 공장을 설립한 현대차는 현재 인도시장 판매 및 수출 부문에서 2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품 관세와 통합부가가치세(GST) 인하를 요청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만 52만

7000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16.4%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에서 생산된 차는 15만대를 수출해 역시 2위에 올랐다.

물류 및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CJ그룹은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을 통해 인도 물류부문 1위 수송사업자인 DARCL 지분 50%를 인수해 합작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CJ는 CJ-DARCL이 인도 해외 합작의 성공 사례가 돼 '메이드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구현해나가기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박용만 회장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CEPA 협정이라든가 신산업과 제조업, 인프라 협력 등 다양한 경제의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회담 결과를 잘 살려갈 수 있게 양국 대표기업들이 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면서 "CEO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수시로 피드백하는 '대화 채널'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벤처부 장관이 대통령따라 인도 간 까닭은?

홍중학 중기부 장관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개소식 참석
"협력통해 중소기업 진출 적극 지원"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으로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홍 장관이 이번 수행길에 처음 들른 인도는 중국의 비통을 이어받아 '제2의 공장'을 자처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블루오션'으로 생각하는 미개척지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중소기업공사(NSIC)에서 열린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기술교류센터는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활성화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란, 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가 5번째다.

센터는 양국이 산업재산권 등을 서로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핵심부품·모듈 등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고 기술·장비를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 등이 주목적이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이 부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연합뉴스

우리 중기부와 인도 중소기업부는 지난해 3월 뉴델리에서 1차 한·인도 중소기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교류 시범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새로 오픈한 센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핀테크·이커머스 등 모바일 서비스, LED·태양광 등 한국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중 강점을 갖고, 교류가 유망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부품·소재 수출, 설비이전, 합작 투자 등 양국 기업간 다양한 협력사업 개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남방 국가의 핵심 국가이며 높은 성장률로 포스트 차이나의 가능성을 가진 인도와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가 매개가 돼 인도의 제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현재 뉴델리 동남부 공단지역에 위치해있던 수출인큐베이터도 뉴델리 남쪽 30km 거리에 있는 산업·경제 중심지 구르가온으로 이전하기

로 했다.

구르가온 지역은 삼성과 현대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과 외국계 대기업이 밀집해있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등이 많아 정주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수출인큐베이터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산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곳에는 인텔전기전자, 한국알루미늄 등 9곳이 입주해 있다.

홍 장관은 전날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비규 위원장과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스타트업 등을 만나 애로와 대정부건의 내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나 인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홍 장관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부대행사로 마련된 '한·인도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에도 참석했다.

홍 장관은 11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길도 함께 수행하며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인도서 '에너지 신사업' 한전, PGCIL과 MOU

한국전력이 인도에서 '에너지 신사업'을 펼친다.

한국전력은 인도 송전망공사인 PGCIL(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Limited)와 에너지 신사업 기술협력 MOC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PGCIL은 1989년 설립된 국영 송변전 회사로 인도 전체 전력의 45%의 송전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인도 모디 정부는 전력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정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향후 인도 내 대규모 전력망 건설 및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확대 예상되고 있다.

모디 정부의 '에너지 국정 목표' 달성 계획은 ▲모든 국민들에게 24시간 전기 공급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2022년까지 225GW 태양광 발전 확보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전력IT 확대 ▲에너지저장시스템 확대 등이다.

양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SG), 전기차(EV) 충전사업 등 에너지신사업 분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의 에너지신사업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또 25%가 넘는 인도의 송배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전의 선진 원격검침 기술을 활용, 전력손실 감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관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이번 상담회에서 인도 동부해안 3개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전의 세계적인 전력기술을 홍보하는 등 주정부와 에너지신사업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계엄령 검토 기무사' 수사 지시

위수령 발동·계엄령 선포 등
前 정부서 문건작성 의혹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꾸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위수령을 발동하고 계엄 선포를 검토한 사실이 적시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탱크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기계화사단과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투입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수사를 위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지만 송 장관은 수사단장만 임명한 뒤 수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현재 기무사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